광주에 500대 설치한다던 'EMS' 한대도 못해

〈친환경 운전 안내 시스템〉

환경부, 겉도는 '친환경 정책' 현실 외면

'저공해 자동차보급 사업' 추진 가능성 미지수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치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작은 했다가 '일회성 탁상 행정' =환경부의 '친환경 운전 안내 시스템(EMS) 보급 사업'은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내걸고 광주 등 전국에서 진행했던 정책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차량에 친환경 운전 안내 시스템을 부착, 운전자들의 친환경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반면, 추진 실적은 '의지가 없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미하다. 지난 2012년 목표로 세웠던 500대 보급 계획은 커녕 200대 보급에 그쳤고 지난해도 비슷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2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버스·택시 등 500대에 설치, 운영하려다 한 대도 보급하지 못한 채 사업을 종료했다.

장비 설치에 따른 운전자 본인 부담 부분(50%)이 걸림돌로 작용한 점도 있지만 보급 장비에 대한 성능 검증이 미흡한 게 가장 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국내 시스템 제작업체 5곳을 대상으로 '장비 적합시험'을 거쳤지만 친환경 운전에 따른 연료소모율, 배출가스량, 배출가스 종류 등의 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채 '연비표시 적합 시험'만 진행, 운전자·버스회사 등의 외면을 받았다. 그나마 모든 자동차에 장착할 만한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 추진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환경부는 올해도 충분한 조사없이 관련 예산을 타지역에 책정해 '일회성' 탁상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계획만 거창한 뜬구름 정책=환경부가 광주시의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추진된 '저공해 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도 구체적 성과는 커녕, 추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광주시는 휘발유나 경유 대신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 등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 연료 전지차를 구입,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국비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당시 진곡산업단지 내 광주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에 수소 충전소 설치계획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전체 36억원 중 시비로 확보해야할 예산(18억)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환경부의 추가 지원도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 해가 다가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야 설계 용역에 나섰지만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수소 충전소 완공도 미뤄진 상태다. 이대로라면 과연 수소연료전지차 운영이 가능할 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4 수소에너지대회'를 유치하고 '수소에너지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광주시의 야심찬 구상도 빛이 바래질 수 밖에 없다.

환경 단체와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주요 정책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수시로 번복되면 정책 불신을 키우고 혼선을 일으켜 부작용을 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남 남해안은 멸종위기종 안식처

매·큰고니·구실잣밤나무군락 등 발견… 전국 5141종 확인

큰고니

구렁이

전남 남해안 지역 섬·해안에서 멸종위기종과 식물 군락 등이 다수 발견됐다.

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해남·진도·신안·홍도 등 전남 해안 지역 등에서 생태계 자원과 지형 등을 조사한 '2012년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신안 도초도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에 속하는 매와 수달을 비롯해 구렁이, 삵 등 Ⅱ급 생물 9종 등 모두 11종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

또 소흑산도에서는 야생비둘기 중 가장 큰 흑비둘기를 포함해 새매, 검은모리 촉새 등 다양한 종류의 조류 멸종 위기종이 관찰됐다.

이외 해남 화원도에서는 겨울철새인 큰기러기와 큰고니, 흰꼬리수리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126목, 5141종에 이르는 동식물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홍도·흑산도의 경우 구실잣밤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소나무군락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 일대를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으로 지정했다. 이외 전남 해안 130여 곳에서는 해식애, 주상절리 등 보존지역 Ⅰ등급(절대보전) 지형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토개발과 생태계 보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적조방제 표준화한다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방제방법·물질 등 전면 재평가

지난해 7월 적조 방제를 위해 어민들이 여수 금오도 해상에서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조 방제 방식과 방제 물질에 대해 전면적인 재평가를 할 계획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적조 방제 대책이 적조 예방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토 살포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던 정부와 전남도 간 갈등도 해소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종합 대책에 따라 향후 적조 발생예보 단계를 현행 '주의보'와 '경보' 등 두 단계에서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적조생물이 1㎖당 300개체 이상일 때 내리는 주의보를, 앞으로는 1㎖당 100개체 이상이면 발령하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적조 예방 대책에 대한 평가도 진행한다. 정부는 황토와 전해수 등 기존 방제 방법과 방제물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진행한 뒤 적조 농도에 따른 방제장비, 방제 물질 사용 시기, 절차, 방법 등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적조 발생 때 전남도는 전해수를, 경남도는 황포를 살포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방제 방법이 달라 현장에서 빚어진 혼란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황토 살포와 관련, 전남도는 당시 황토 살포 효과가 미미하고,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반면, 해양수산부 등은 황토살포는 저서생태계 영향 등 2차 환경오염 우려가 거의 없고 저비용, 고효율 방제대책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외 동중국해·남해의 적조 유입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올해부터 먹는 지하수 우라늄 검사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모든 마을 상수도와 급수시설에 대한 우라늄 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300인 미만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우라늄 검사 대상 시설로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마을 상수도 중 이용자 100명 이상 2500명 미만, 하루 평균 급수량이 20㎥이상 500㎥ 미만인 수도시설과 100명 미만 또는 하루 평균 급수량이 20㎥미만인 급수시설에 대해 우라늄을 포함한 '전 항목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검사 결과에 따라 2년, 3년, 6년으로 차등화해 우라늄 검사가 진행된다.

한편, 환경부가 내놓은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상수도와 개인 음용 지하수 563개 지점 중 4.3%인 24곳에서 기준치(30㎍/ℓ)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된 바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태양파워 오지마을서 '1박2일'

광주환경聯, 참가 어린이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완주 덕암에너지마을에서 열리는 어린이 겨울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태양의 파워로 사는 오지마을 탐험'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에 준비된 각종 친환경 발전 설비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 활동도 진행한다.

참여대상은 초등 학교 1~6학년(선착순 30명). 참가비는 회원은 8만 원, 비회원은 9만 원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겨울철 야생동물 생태계 위협

환경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환경부는 잘못된 보신 풍조와 맞물려 점점 지능화하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활동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밀렵·밀거래 단속건수는 2008년 819건에서 지난해 480건으로 41%가량 감소했지만, 전문 밀렵꾼들의 지속적인 밀렵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밀렵이 성행하는 3월 중순까지 밀렵이나 수렵 총기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3~5개 시·군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24시간 단속할 방침이다.

전문 밀렵은 물론 포획 승인량을 초과한 수렵, 수렵지역 이탈, 건강원의 야생동물 밀거래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도 확인표지(tag)를 부착해야 한다. 2012년 도입한 확인표지는 수렵시 재활용할 수 없는 표지를 포획한 야생동물에 붙이도록 한 제도다. 표지가 없으면 불법 밀렵한 것으로 간주한다.

밀렵 신고 포상금도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야생동물 밀렵 근절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정상 매매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전망 좋음
   시세/분양가, 2억원 정도
   매매가, 1억 5,500만원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층 상가, 25평
   현재, 편의점 임대중
   (보 3천에 월125만원)
   시세/분양가, 2억5천만원 정도
   매매가, 1억 7,500만원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20% 보장
   투자금 3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집기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